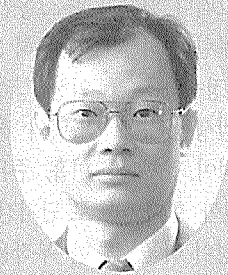


# 한국 석유산업의 미래



문영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장 · 경제학박사 〉

**대** 한석유협회가 발족한 지 벌써 17년이 되었다. 한국 석유산업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석유협회 역시 업계의 공동이익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한국석유산업 및 석유협회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가 기대되

며,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산업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석유산업이 처할 위치에 대한 예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석유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최근 들어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양적 팽창에 의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쳐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으며, 그 원인이자 결과로서 중소

기업 뿐만 아니라 거대기업군들조차 부실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석유업계에는 대안의 불로서만 치부될 수 있을까? 석유산업의 환경변화는 그 변화 속도 뿐만 아니라, 변화의 질적 특성 역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산업의 양적 성장에 수반되는 제반 주변여건의 적응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점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적인 팽창과는 무관한 질적 변화가 부각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규제제도의 변동이고, 다음으로는 이와 인과관계에 있는 산업구조 및 대외환경의 변동이다. 지금 철강과 자동차업계가 앓고 있는 구조개편의 몸살이 석유업계에 도 피부에 와닿는 현상이 될 날이 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현재 각사에서는 경영효율화, 판매조직개편, 경쟁력향상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두 경쟁시대를 헤쳐나가는 과정이고, 더욱 거세질 경쟁의 물결에 대비하는 작업이다.

과거와 현재의 석유산업 경영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들라면 가격과 가동률이라는 변수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이 두 변수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이 두변수가 중요해지게 된

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수요조건외의 변동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규제의 완화이다. 이전에는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 뿐만 아니라 공장도가격까지 정부에서 결정하는 정책변수로서 정제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주어지는 상수일 뿐이었다. 그리고 수요증가에 있어서 설비가동률은 항상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 되어, 별다른 의사결정이 필요없는 변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석유 수요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숙단계에 진입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의 가격정책이 고가격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석유 수요증가율의 둔화추세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비가동률은 경기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수요량 그리고 정유사가 결정하는 가격에 의해 변동되는 자신의 수요점유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최고의 가동률만을 고수하는 전략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은 수익성을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영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석유산업이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 세가지를 제시해 보았다.

## (1) 규모의 경제성 유지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든든한 내수 기반 및 급속한 수요신장세를 기초로 해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국가의 상황을 봐도 단일공장의 규모가 10만 b/d 정도에 머물러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최소규모가 27.5만 배럴은 81만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장치산업인 석유산업의 특성상 평균비용이 규모에 비례하여 하락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양호한 조건에 처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비용곡선이 규모에 따라 무한히 하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이점이 향후 경계되어야 할 대목이 아닐까 한다. 앞서 지적한 가동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도 이 단계에서이다.

## (2) 결합의 경제성 추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합의 경제성이다. 규모의 경제에 못지 않게 장치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이 결합의 경제성이다. 결합의 경제성이란 생산 및 판매과정의 흐름상에서 상위와 하위단계가 단일 사업자에 의해 운영될 때 발생하는 비용절감 가능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정제 이전 단계인 원유생산 및 발전단계, 정제 이하의 단계인 판매 단계와의 상하위 두방향에서 모두 결합의 경제성을 추진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경제성 향상이 가능한 방향은 유통분야와의 결합의 경제성을 더욱 추구하는 것이 될 터이고, 장기적으로는 상류분야로의 진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결정하는 적정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유통망이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한국석유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대개의 경우 유통부문을 꼽을 정도로 우리의 석유유통부문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해 왔다. 특히 3단계 유통구조의 법제화로 인한 경직된 유통구조와 3.14 조정명령의 결과로 초래된 유통계열화의 미흡,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의 여파로 단기간에 주유소가 급증함으로 인한 부작용, 정유시간의 판매망 확대를 위한 과당경쟁의 결과로 야기된 유통질서의 문란 등 도처에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막상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져서 외국기업과 국내시장을 두고 경쟁할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결국은 유통부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조달에서 우위에 있고, 막대한 자금력과 마케팅 경험을 갖고 있는 그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부문은 잘 정비된 유통망일 수 밖에 없다.

과연 현재의 유통부문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능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 (3) 경쟁의 효율성 활용

마지막으로 경제학이 금과옥조로 받들고 있는 경쟁의 효율성이다. 그동안 정부리는 강력한 조정자가 존재하는 상황에 익숙해 있는 석유산업 및 시장경쟁의 형태가, 이러한 조정자의 개입 없이 과연 제대로 시장균형을 찾아나갈 수 있겠는가? 또는 공정한 경쟁의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리는 감시자의 퇴장은 시장을 파국의 상황으로 몰고 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이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경쟁이 진실로 경쟁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풍토를 모두가 노력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경쟁을 피함으로써 살아남으려는 전략은 언젠가는 업계전체가 구조조정에 의해 개편되는 것이 시장(市場)의 원리이다.

구조조정이나 경쟁의 고통을 치통(齒痛)에 비유한다면 그것이 징후가 나타났을 때 가급적 빨리 치과치료를 하는 것이 상책이지 이를 미룰 경우 불필요한 고통의 증가와 비용부담이 뒤따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진국 석유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이점이다.

'99년부터는 신규진입 자유화 및 석유시장의 대외개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성장일변도의 경영전략과는 다른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른바 요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는 것이다. 신규참입 및 외부로부터의 경쟁압력에 의한 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대비한 준비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석유협회 및 한국석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

#### 경제용어

### 자산유통화

개개의 채권자산을 모은 합동자산에 대해 현금흐름이나 자산가치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 판매하는 금융수단.

이러한 구조하에서 투자자는 투자위험을 분담하고 대신 이익에 대해서는 비례제로 향유하게 된다.

유통증권의 발행을 통해 실시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자산참여의 형태일 수도 있다.

최근 몇년간 미국에서의 자산유통화구조는 점점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에서도 3가지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자동이체형, 원리금이체형, 담보부

채무형으로 나뉜다.

가장 손쉬운 것은 자동이체형이나 현재 한국에서 선호되는 담보부채무방식은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자산의 소유자는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담보로 대부분 받는 것으로 발행되는 차용증권은 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신용개선은 초과담보로 이루어진다. 이 구조는 조달비용이 저렴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